

2021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2020

인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

순 서

I. 총괄의견	2
II. 분야별 의견 요지	3
III. 분야별 의견	6
첨부 : 2020년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 현황	28

I 총괄의견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회복 지연과 소비감소로 인해 세입규모가 불투명하여 시 재정운용이 경직될 것이 우려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등 융통성 있는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과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필요 있음

- 세외수입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여유재원을 활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이 필요함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영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이 우선시 됨
- 또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생활SOC, 원도심 재생 등 도시의 기본기능을 확충하는 기반시설 구축 예산과 선제적 재난안전 인프라구축은 지속되어야 함

□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정부의 한국판뉴딜*과 연계한 인천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집중투자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주기 바람

- 비대면 정책기조에 따른 디지털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어촌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정책 필요함
-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발을 방지하고 도시·해양 생태계 복원과 공원녹지 확충을 통해 친환경도시 인천으로 거듭남으로써 시민들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주기바람

* (정부 2+1) 디지털, 그린뉴딜+안전망구축, (인천 3+1)디지털, 그린, 바이오뉴딜 + 휴먼뉴딜

□ 시민의 다양한 참여기회 보장과 공론화장 활성화가 필요하며 시정의 주민참여방식도 쉽게 접근하여 이해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지속요구

- 행사성 사업은 재검토하고 인천만의 콘텐츠 개발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지역·시민 간 갈등을 줄이고 공론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필요함. 2021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등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안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2021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민교육·홍보 강화와 지표선정 및 성과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제도의 시민 인식제고와 참여 확대 노력바람

II 분야별 의견

□ 기획재정분야

- 코로나19 재난사태가 야기한 온라인 교육환경에서 학생 교육환경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고 무상 급식사업에 지역 농산물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또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적절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취지에 걸맞는 사업 선정 등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야 함.

□ 소통행정분야

- 예산의 방향을 일반시민의 다양한 참여기회 보장, 크고 작은 공론장 활성화와 운영개선 필요하며 공론화위원회의가 대표성을 갖추도록 공개추첨과 권한과 책임부여가 필요함
- 민관협치, 관관협치,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권한부여 필요하며 시정홍보의 경우 쉽게 접근하고 쉽게 확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방식 고민바라며 시민참여를 행사보다는 교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바람

□ 재난안전분야

- 선제적 재난안전 시설·인프라 구축과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의 정책적 균형을 이루는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업 발굴의 다각화 및 예산편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소방본부는 소방분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사업추진

□ 경제산업분야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업자,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천e음 플랫폼이 지역순환 경제시스템으로서 기반을 구축하도록 확대하여야 함

□ 해양항공분야

- 해양항공분야는 사업특성상 지속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임으로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 부적정 기준'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해양항공분야 융합사업 발굴 및 예산편성이 요구됨

□ 복지보건분야

-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생활체육시설의 확대·유지보수가 시급하며 인천의 인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로 급속한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와 여가문화, 일자리 예산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함.

□ 여성가족분야

- 1인 가구를 위한 로드맵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역량강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발굴이 필요함
-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효과가 입증 가능한 사업위주 편성노력 바람직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들을 통합운영 요구함

□ 문화관광분야

- 기존 관행적 행사는 사업의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천만의 온라인 문화콘텐츠 개발과 개별적 추진 사업의 적절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발굴바람

□ 환경녹지분야

- 황사, 미세먼지, 기후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친환경 미래에너지사업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하며 동물복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인천에 반려견공원 조성 등 동물복지와 관련한 사업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교통분야

-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소전기차, ICT 교통시스템 도입 등 친환경 교통 지원정책 지속이 필요함

□ 도시건설분야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2기·3기 신도시 상생발전 방안, 서북부 중심 도시개발과 함께 원도심의 균형발전 강화 방안 등을 반영하고,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 및 예산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 선정률 극대화 방안 강구(민간전문가 포함) 및 예산편성 필요

□ IFEZ분야

- IFEZ 미래비전 4대 전략 15대 과제에서는 IFEZ에 상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목표는 없음. '문화예술 콘텐츠' 확충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머물고 싶은 IFEZ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부족함
- IFEZ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 된 예산반영과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격차발생으로 인한 시민간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공헌사업에 필요한 예산 필요
- 참여예산액의 증액이라는 양적성장과 더불어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질적인 성장을 위해 지표선정을 통한 성과목표관리 도입바람

Ⅲ 분야별 의견

◇ 기획재정분야

□ 기획조정실

- 코로나19 재난사태가 야기한 온라인 교육환경에서 학생 교육환경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함.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 급식에 지역 농산물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제출된 사업이 대부분 인프라 구축, 실행 계획 단계의 사업이라 구체적인 제안이 어려우나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사업들인 만큼 당장에 급급하기보다 철저한 조사와 예측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특히 스마트 도시와 관련하여서는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중복 사업을 피하고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부서간의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함.

<주요 의견>

- ① 인천데이터센터 백업시스템 고도화 : 향후 10년의 데이터 처리에도 모자람이 없도록 구축
- ② 10g네트워크망 인프라 구축 : 단순 노후 시설 교체가 아닌 차세대 통신망 구축의 방향성을 가져야함.
- ③ 인프라 구축 외에 현재 상황에서의 활용 가능한 정보화 관련 사업도 기획되어야 할 것.
- ④ 온라인 시민시장실 2단계 구축: 이전에 1단계의 성과나 결과가 어떠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
- 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수립 단계 구축 단계의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가

어려움.

- ⑥ 인천 도시재생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 꼭 공모방식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부족, 1개 구에서 실행하기엔 적은 예산(5억), 향후 인천시 전체로 확장해야 함.
- ⑦ 디지털트윈 플랫폼 확장 및 데이터댐 구축 : GIS데이터의 활용이 시민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세한 비전을 설명해야 함.
- ⑧ 인천시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과 무상급식을 하고 있음. 하지만 수많은 타 지자체는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을 뛰어넘어 로컬푸드와 학교급식을 연계해 지역의 우수농수산물을 공공, 학교 급식에 제공해 코로나19로 힘든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정부도 로컬푸드와 공공학교급식 연계를 지원하고 있음. 학교급식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타 지자체처럼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극복을 위해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함.
- ⑨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이는 교육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온라인교육 활성화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세대별 경제적 격차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함.
- ⑩ 학생 교육은 교육청에 전적으로 일임, 시정부는 비판적인 지성과 현대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실무적 지식을 쌓기 위한 ‘평생학습’ 체계를 갖추는데 더 많은 투자 필요.
- ⑪ 정보화, 데이터혁신, 스마트도시담당관실이 병렬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가는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검토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재정기획관

- 주민참여예산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한 만큼 그 예산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론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참여 권리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맞는 유연한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는 사업 선정 등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야 함.

<주요 의견>

-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2개 분과위원회 외에 인천광역시 예산 전체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분과 필요
- ②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부서 예산에 대한 평가 의견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예산참여 권리 확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 ③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을 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④ 21년 예산편성 방향과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다 구체화 하여 제출하길 바람
- 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작년에 선정되어 올해 추진되는 참여예산사업이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심각하게 축소되어 본래 취지가 훼손당하거나 아예 사업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음. 참여예산사업이 단년도 시행이 원칙이지만 참여예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재난상황에 맞는 유연한 운영이 필요함.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는 것이 사업 취소보다 참여예산 원래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임. 내년도 예산편성함에 있어 올해 추진되는 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업 이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 ⑥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운영관련 주민들의 참여가 제대로 높아졌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함. 민원성 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을 뿐만 아니라, 관이 필요로 하는 일반 회계 사업들을 민관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어 운영하는 실태가 상당함. 인천시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직접 운영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소통행정분야

- 시민정책담당관실 : 인천시의 정책방향이 시민의 참여 제고에 있다면 예산의 방향을 일반시민의 다양한 참여기회 보장, 크고 작은 공론장 활성화에 뒤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 “인천시민대토론회”를 1회 운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보여주기 식 운영(진행자 위주의 발언/기계적 시간나누기/동원된 참가자/적은 시간운영 등)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의 경험이 깊이 남을 수 있는 공론장 운영이 필요합니다.(주요 정책별/부서협력사업으로)

또한 지역현안에 따른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통계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첨 방식 뿐 아니라 관심 있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도 충분한 홍보와 시간을 두고 공개모집을 하여 현장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때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는 충분한 숙의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숙의과정이 보장될 수 있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예산사업인 국민운동단체 및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 사업추진에 약 12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위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방식으로 개별단체 자체사업을 위한 지원 및 운영비(인건비, 임차비, 업무추진비 등) 지원, 시설비 지원, 그리고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 사업규모와 참가자 및 수혜자,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맞게 적절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방적인 방식 보다는 시민들의 공론장을 통해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 협치인권담당관실 : 협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서간 협력(관관협치)과 민간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습의 기회, 그리고 협치가 일어나는 현장에 대한 권한 부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편성된 예산을 보면 협치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있으나, 그 외에 협치에 참여해야 할 각 주체의 협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협치에 참여해야 할 현장의 주체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비영리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합니다. 마을공동체만 누적 640여개가 있으며, 주민자치회도 올해까지 90여개동이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의 경우 넓은 범위에서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이 본래 해야하는 역할을 근린영역단위로 쪼개어 주민공동체의 복지증진과 자치의 실현을 대신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때 마을공동체에 필요한건 일방적 교육이 아니라 활동의 기반을 확장시키는 것이라 보며, 사업으로 구분하자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12억 9천) 중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운영(5억 7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3억), 마을계획 지원사업(2억),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1억) 등입니다. 여기에 고민을 더해야 하는 것은 “각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와 “마을활동가(일반) 및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한 사회적 보상”입니다. 단순히 마을공동체가 있고, 요청이 있으니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천시민의 전반적 행복추구권의 성취를 위해, 그리고 행정이 해결할 수 없는 현안을 자치적으로 해결하여 인천시민의 전반적 행복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은 다양하고 시민편의적(공동체 중심)인 방식으로 편성/집행되어야 합니다. 경험이 가장 큰 학습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지속적 편성을 통해 현장에 경험이 축적되고 사람이 남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기회와 권한이 보장될수록 공동체는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치의 장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보여주기 식의 일방적인 교육이나 일방적인 지침안내는 되려 공동체와 활동가에게 “동원”이라는 부정적 경험을 갖게 하며, 그 결과로 공동체활동이 저해되거나 공동체가 해체되는 등 부정적 결과가 남기도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경우는 마을공동체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행정에 의존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공공성을 위한 학습의 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부터 주민자치위원회(동정자문의 역할로 대표성이 없는 개별 자생단체 위상)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있고, 다소 급한 목표로 인해 시민 대상의 충분한 홍보와 기반조성 없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많은 경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다수와 각종 자생단체의 대표들이 우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개별 자생단체가 하는 역할을 똑같이 답습하며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각 마을공동체와 기관, 단체 등을 연결해야 하는 대표로서의 업무를 경외시 하기도 합니다.(경험의 부재) 주민자치회는 구성 전 단계에서도 학습의 장이 필요하지만, 구성 이후에도 학습이 우선 이루어져야 자치회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역량강화 관련 예산이 더욱 편성되어야 합니다.

○ 소통기획담당관실 :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대부분 시정홍보인 것 같습니다. 마침 이번 참여예산과정에서도 반복하여 나왔던 의견 중 하나가 시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넓은 홍보와, 각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홍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 전체계획과 사업제안방식, 종류, 예시 등은 일반 시민 전체에게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되, 참여하는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알아야 할 행정정보(관련부서 사업내용, 광역/기초 단위

사업의 구분 등)를 참여시민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여가 요구되는 교육 방식보다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홍보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민에게 전할까를 세밀하게 고민해 주시고, 예산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 시민의 참여를 행사쪽으로만 하시지 말고 다양한 사업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학생대상 공모를 하거나, 탈북민들과 시민, 학생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는 소규모 집담회 또는 공론장(원탁 토론회, 정책마켓)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인식의 직접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의 예산사업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분야

□ 시민안전본부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에 부합한 인천시 안전정책 재정비, 사업 발굴 및 예산편성이 필요함. 선제적 재난안전 시설·인프라 구축과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의 정책적 균형을 이루는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업 발굴의 다각화 및 예산편성을 추진해야 함.
- 2020년 시민안전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예산편성이 매우 적었던 '시민 참여형 안전교육·안전문화활동(안전점검)·재난대응훈련 기반의 시민 안전의식 개선' 사업 및 예산편성을 확대해야 함.
- 행정안전부의 시민안전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지원의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확충 및 예산편성이 필요함(사례 : '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시민안전)'의 지역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국비 지원으로 추진).

-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등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감염병 예방·대응책 강화 및 예산편성이 필요함. 사회재난과에서 유관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감염병 예방·대응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노후 승강기·어린이놀이시설 점검 강화 및 예산 증액이 필요함. 승강기 '갑질사고'는 2015년 1,247건에서 2019년 9월 4,821건 발생하여 4배 증가하였는데, 2020년 6월 기준 전국 734,665대(인천 39,234대) 중 32%가 15년 경과 승강기임(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소방본부

- 2020년 노인안전교육, 안심수학여행 지원 사업 등 소방본부의 사업 영역이 비대해지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 및 예산 조정이 필요함.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에서 시민·취약계층 안전교육 사업 및 예산편성(일반회계)을 총괄하고, 소방본부는 소방 분야에 한하여 지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소방본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함.
-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처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소방차 진입로 확보 방안 마련 및 예산편성이 필요함.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업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야 함(사례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 협업프로젝트(시민안전)의 '소방차 썬썬 민관협력 거버넌스').
- 현재 경제적 취약가구에 한하여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방시설 무상지원 사업을 노후·소규모(단독·빌라) 주택으로 확대하고 본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함(인천연구원, '인천시 안전도시 진단 시설물 및 노후주택 화재실태 분석' 결과보고서(2020.03.30. 발표) 참고).
- 대시민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 강화 및 예산 증액이 필요함. 유관부서, 전문교육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고령층과 그 가족 대상의 교육을 확대해야 함.
- 소방용 드론 구입·관리 방안 마련 및 예산편성이 필요함. 드론은 해상·산악 등 다양한 안전사고 지대를 효과적으로 감시·구조하는 수단으로써 그 활용성이 높음.

◇경제산업분야

- 인천e음관련해서 : 캐시백 의존에서 벗어나 인천e음 플랫폼 기능 강화, 지역선순환 경제시스템으로서 기반 구축을 위해 예산,인력을 투입해야 함.
- 배달앱 기능 강화는 관 주도가 아닌 민/관 거버넌스 또는 사회적기업 등이 추진
- 중소기업지원관련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자를 위한 2차지원 사업이 적극 추진(저금리 융자, 만기 연기 등)
- 사회적경제 강화관련 : 코로나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지원 확대
 - 스케일업 확대 지원으로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필요
- 노동인권관련 : 취약계층 대상 (청소년 등) 노동·인권 교육 확대
- 청년관련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중소·중견기업 청년일자리 확대 추진
- 동물복지관련 : 반려견에 대한 관심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동물복지와 관련한 사업이 추진 & 기획되어야 함

◇해양항공분야

- 국가 공모·제안사업 선정 극대화를 위한 전담 인력 운영 및 예산편성이 필요함. 어촌 뉴딜 300사업, 수산자원 조성, 해양치유산업, 수산식품산업, 항공산업 및 드론산업 클러스트 조성 등 해양항공국은 국책사업 비중이 높으므로 국가 공모사업을 선제적·체계적으로 참여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담 조직(민간전문가 포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대책((2019.5.50),)'을 반영한 인천 앞바다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방안(국비 지원) 마련 및 예산편성이 필요함.(기존 해양쓰레기 관리사업과 별도 추진).
- 사업부서별 추진사업들 간 연관성이 높은바, 어촌뉴딜 300사업과 소규모 마리나항 개발, 어촌뉴딜 300사업과 도서별 해양치유산업 개발 등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융합사업 발굴 및 예산편성이 필요함.
- 도서발전지원센터의 인력 충원·역할 강화 및 예산 증액이 필요함. 섬 마을 만들기 사업,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 및 어촌 특성화 사업 등은 상호 연관성이 높은 사업으로, 도서발전지원센터가 총괄 관리함으로써 유관부서 간 협업 촉진·사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됨(인천관광공사 위탁대행 방식 재검토 필요).
- 경인아라뱃길 종합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예산편성이 필요함. 공공 시설물 관리, 수변문화공간 조성, 경인아라뱃길~한강 뱃길 개통, 인천터미널 마리나항만 등 해양항공국 주도로 유관 부서 및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종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 발굴을 추진해야 함.
- 국가보조항로 및 국비 지원의 지속적 확대로 도서민의 이동권을 확충해야 함.
- 주민제안사업 중 장기사업이나 지속사업이란 이유로 미반영된 사업을 본예산의 신규사업이나 유사사업에 포함시켜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음.(사례 : 드론공공서비스 사업지원의 '드론 시민체험공간 조성 연구'에 주민제안사업인 '드론 실내교육장 설립'을 포함하여 검토)
- 해양항공국 내 '중장기전략팀' 조직 및 예산편성이 필요함. 해양항공국은 공항경제권 형성, 해양 관광개발 및 자원관리, 섬 발전 등의 관련 사업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므로, 하늘-바다-섬을 아우르는 중장기적 융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

타위를 구축해야 함. 그럴 때 인천시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한정된 자원을 적기에 생산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 체계적으로 해양(섬)·공항·관광의 글로벌 융합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음.

◇ 복지보건분야

- 코로나19 등 향후 발생할 수 전염병으로 인해 국가재난 사태가 재발할 경우를 대비한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이 시급함. 또한 인천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으로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지나 공공지출 확대로 인해 시설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기대가 많음. 한정된 공공부문의 자원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규모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으로는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시민이 느끼는 복지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동 단위의 소규모 민간 복지시설의 지원이 확대되어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확대가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서비스대상자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돌봄 환경이 열악할수록 부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므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바람.
-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해 대규모 체육시설의 신규 설립보다는 생활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해야 하며,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가 필요함.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라톤 등의 소규모 행사의 지원이 필요함.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일과시간을 포함하되 영세자영업자 등의 생활시간을 고려한 운영 계획의 확대가 필요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역사회 어린이 및 영양관리 활동의 확대운영이 필요해 보임. 또한 소비자 참여를 통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을 보장하여 위생취약지역의 효율적인 식품안전지도가 필요함.
-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익옹호를 위해 기존 실시된 학대피해와 예방을 넘어 시민의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
- 인천의 인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로 급속한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와 여가문화, 일자리 예산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함.

◇ 여성가족분야

- 2020년도 예산에 「1인가구에 대한 여성, 비혼여성, 노인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 1인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시책에 담은 1인가족을 위한 로드맵과 시스템 구축 필요하다」는 의견이 19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작성되었으나 미반영되어있음.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더욱 확대 하여야 하며 종사자들의 전문성 역시 검증하여 전문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하는 부분의 중요성이 크며, 교육청이 지원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의 지원이 크게 차이 나는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원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성이 크며 대체교사, 보육교사, 연장반 전담교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명칭을 [교사]라고 통칭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원 단가 및 경력 인정 없이 정액의 임금을 받는 불리함 존재하므로 이를 해결위해 경력에 따른 임금의 차등을 주고 지원 단가 역시 전문직에 맞는 임금 기준을 갖추어 인천시가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함.
- “인천형 작은 결혼식”처럼 예산의 낭비인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실제적, 지속적 효과성 입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각 부서의 노력이 필요함.

- 다문화가정의 지원사업 및 가족 지원사업 등의 경우 1인 또는 한가정 단위로 연계기관 등 통합적 지원서비스 가능토록 하여 중복지원 예방 및 실제적 개선할 수 있게 통합지원사업으로 변경이 필요함.

①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및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 확대

- 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인천은 2021년 예산편성 기본방향내 지속, 발전 되어야함.

- 2020년 여성정책과 주요사업으로 1. 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인천 진행. 세부 사업으로 인천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 성평등 자료관 설치·개관, 시민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청년양성평등 문화혁신사업, 인천여성영화제, 차세대여성리더 육성사업등을 진행함. 또한 여성·가족 정책 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진행함.

- 이는 인천이 '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임.

- 이중 7월에 진행된 인천여성영화제는 철저한 방역관리와 온라인 GV(감독과의 대화)를 진행.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성평등 도시 인천을 바라는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인천시민의 성평등 의식 향상에 기여함.

- 여성영화제 관련 총 33여 편의 작품이 상영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코로나19로 홍보 및 참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 여성주간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인천시민이 호응하고 인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한 홍보가 필요함.

-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및 성별 영향 평가 실시

-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이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좀 더 폭넓은 대상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음. 각종 보수교육, 의무교육의 기본 이수 과정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아동, 청소년, 청·장년 등 대상에 따른 다양한 접근 요함.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 선택한 국제포럼 개최이었지만 일반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방법은 아님.

- 202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업 확대 중요함. 더불어 성평등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성평등 의식 및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예산편성 기본방향에도 주요하게 들어가야 함.

- 인천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 디지털범죄(저작권침해, 모욕죄, 명예훼손 등) 예방까지 확장하여 센터 운영 바람.

- 주요사업 정책방향 자료에 '양성평등', '성평등'과 같이 용어를 달리하여 표기한 부분은 성평등으로 일괄표기하여 배포하였으면 함.

- 여성폭력 예방지원 및 새일센터 취·창업 연계

- 여성폭력 예방지원, 새일센터 취·창업 연계는 매우 국소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함. 여성의 건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연계 필요. 단순 노무/기간제/아르바이트보다 전문성을 갖춘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의 취업기회 제공, 여성의 전문적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함.

②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기반 조성 및 보육서비스 체계적 추진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매우 바람직하지만 민간 어린이집과의 차등지원이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는아동과 부모가 상대적 박탈감이나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민간 어린이집 지원도 필요함.

- 공공형 어린이집 및 인천형 어린이집 선정

- 좀 더 많은 민간 어린이집이 참여하도록 진행하면 좋겠음

- 혁신 복합 육아센터 건립 추진

③ 아이낳기 좋은 출산 친화 환경조성 및 양육친화적 환경조성

- 출산 축하 지원금 지원 및 임신 출산 건강관리 지원

- 출산 축하 지원금, 임신 출산 건강관리 지원은 높은 호응을 받고 있지만 쉽게 타 지자체와 비교 대상이 됨으로 만족도를 참조하여 지원하면 좋겠음.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 등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이나 아이사랑꿈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평은 좋지 않았음. 인근에 거주자의 이용에 한정되어 있어 접근성이 모두의 공감을 받기 어려웠음. 국공립이지만 1개소당 지원금이 많다는 평가가 있음.

④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 아동권리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 학교밖 청소년 서비스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활성화

⑤ 다양한 가족 지원 구축 및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확산

○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

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사회교육기관 운영

○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교양, 체육, 자격증 취득 등) 운영

○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시 성인지 교육 필수 운영

- 2021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중 6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사회교육기관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 여성사회프로그램 운영시 필수 이수 교육으로 성인지 교육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더불어 성평등 의식 및 정책제안 역량 강화에 필요.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여성정책분야 사업은 미미함.

-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성인지 교육과 여성정책 교육을 필수로 진행하여, 여성들의 참여확대가 주민참여예산과 여성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⑦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도시 인천구현

○ 지역아동센터와 결식아동 급식비의 현실감 있는 인상이 요망됨

○ 국적으로 아동의 의무급식이 실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참여하여 급식서비스의 체계와 질 등이 향상되어 아동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함

- 아동, 가족 상담 및 심리치료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 지속적인 인천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고있는 현실속에 다른 분과보다 여성가족분과는 정책과 예산 배분 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과라고 생각함.

- 인천 시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참신하고 발전적인 사업 제안이 필요함.

- 부서별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 필요함.소수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소외된 많은 여성 가족들의 평안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삶의 활력소가 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 요망

◇ 문화관광분야

○ 기존에 해오던 관행적인 사업은 지양해야 함. 특히 개항장과 관련한 사업은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룸만 바뀌가며 제출되고 있으며 실제로 인천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나 관광객 유입효과도 미지수임.

○ 음악도시와 관련해서도 공연, 축제의 양상에서 벗어나 인천 대중 예술인들의 실태 파악과 공연 기회 제공 등 생활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 기획이 필요해보임.

○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사업들이 반영되었음. 코로나19 이후

문화 콘텐츠의 양상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어가는 추세인데 장기적 안목으로 사업 기획이 되어야 함. 특히 콘텐츠 사업은 개별사업이라기 보다 각 사업들이 어떻게 연계 되어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야 함.

<주요 사업별 의견>

- ① 메가음악이벤트 유치 : 음악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 음악축제나 공연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제고해야 함. 현재 락 페스티벌, INK콘서트, EDM콘서트 등 많은 음악 사업이 있지만 락 페스티벌 외에는 실질적으로 인지도 없고 예산낭비라고 생각됨. 그 외에도 음악축제는 많으나 1회성 사업이 아닌 대중 음악인들의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사업은 없다고 생각되며 또한 타 지역 예술인들이 인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정한 음악도시로 나아가야 하며 수많은 축제가 난무하는 현실에 메가음악이벤트 유치의 기대효과나 목적 등 의미를 모르겠음.
- ② 온라인예술활동사업 지원 : 시민들이 공감하고 필요하며 이슈가 되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함.
- ③ 수봉문화회관 시설 개보수 : 현실적인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시설의 노후로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입주 단체나 인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 인지 파악하여야 하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예산낭비가 아닌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 ④ 문화콘텐츠과의 세가지 사업은 시행 초기로서 사업의 방향 설정이 중요함. 따라서 개별사업으로서만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통합적인 시각으로 사업계획을 실행하길 바람.
- ⑤ 송학동 시장관사 정원 정비(2단계) 및 위탁운영 : 사업 시행자 선정, 위탁 운영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 ⑥ 공공도서관 택배비 지원 사업 :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시대적인 흐름에 빠르게 대응한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됨.

- ⑦ 미디어 활용 인천 관광 국내 인지도 제고 : 기존에도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인천 지역이 알려진 적이 있고,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홍보도 진행해왔음. 이와 어떤 차별점을 두고 있는지 명확히 계획해야 할 것임.
- ⑧ 인천개항장 역사문화순례길 : 유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현실적인 사업의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환경녹지분야

- 친환경 미래 에너지사업 인프라 구축관련 :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기차, 수소차에 구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친환경 미래 에너지사업 인프라 구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함.
- 태양광 보조금 지급 사업을 인천에서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 저감 대책관련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책(친환경 버스로 하루빨리 교체하고, 인천도 시기를 정해서 휘발유 경유차 진입금지)도 고민해 봐야 함.
- '미세먼지차단 숲'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 사업 효과를 어떻게 수치화 할 수 있는지 평가 마련 필요
- GCF유치관련 : 단순히 유치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머무르지 말고 인천시 차원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실천하는 도시'인천'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음
- 도시녹화사업관련 : 지구온난화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도시녹화 사업 추진 필요가 (신도시 개발 시 의무사항 등) 있음
- 도시농업관련 사업 더욱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 (예:미추홀도시농업지원센터)
- 도시공원조성관련 : 동물복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인천에 반려견공원 조성등 동물복지와 관련한 사업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교통 분야

-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함.
 - 기존의 교통안전시설들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 함.
 -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하여 수시로 시민의견을 듣고 모니터링 하는 등 안정화 작업과, 집 앞, 전철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활성화 필요
 -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지원정책 지속되어야 함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의 색을 붉은색보다 노란색 계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검토 필요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시민안전 증진 도모 필요
 -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긴급차량 진입로 및 도로 소통능력 확보하는 등 기본적인 주차서비스 이외에 실시간 주차정보 및 공유서비스 제공 등 IC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주차장 공유 플랫폼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주차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주차장을 건립하기보다는 기존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필요

◇ 도시건설분야

□ 도시계획국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2기·3기 신도시 상생발전 방안, 서북부 중심 도시개발과 함께 원도심의 균형발전 강화 방안,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방안, 부대 이전 및 재배치를 원도심 활성화 방안, 전체 도시경관을 고려한 도시개발계획 등을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중심의 지속적·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도시개발정책협의회(가칭)」의 운영 및 예산편성이 필요함.

- 2기·3기 신도시 상생발전 추진 방안 1순위로 시 차원에서 서북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의 다각화 및 예산편성이 필요함.
- 캠프마켓 내 원형 보존가치가 높은 시설물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군부대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방부 지역개발사업 등 사업 발굴·관리방안 및 예산편성이 필요함.
- 도시계획시설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및 예산편성이 필요함. 자치구별 도시계획시설 관리 평가제(성과관리) 시행 및 평가결과 공개로, 자치구의 도시계획시설 관리 행정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 도시재생건설국

-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 및 예산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 선정률 극대화 방안 강구(민간전문가 포함) 및 예산편성이 필요함.
-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생사업 확충 및 예산편성이 필요함. 과시성이나 소모성 사업 방지 방안(주민 만족도, 지역 발전도 등 사후평가관리제 운영), 기존 주민·소상공인 중심의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함(외지인 투기 차단, 기존 건축물 보존 및 활용 등).
- 도시개발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예산 증액이 필요함. 지역주민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재생 역량 강화·도시재생사업 컨설팅·시민 중심의 도시재생정책협의회 운영·도시재생대학 확대 운영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
- 2020년 도로 정비·관리 예산 524억원 중 민자터널운영 재정지원과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지원 예산 343억원이 65% 차지(전년도 대비 37.9억원 증가)하므로 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사용자 부담원칙과의 균형 방안을 마련하여 중장기적 예산 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함.

◇ IFEZ 분야

- 356,612명(2020.3월말 기준)이 상주하고 있는 IFEZ
IFEZ 미래비전 4대 전략 15대 과제에서는 IFEZ에 상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목표는 없습니다.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과제의 경우에도 '문화예술 콘텐츠' 확충을 제외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과제들로 보입니다.
- 주민들의 머물고 싶은 IFEZ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IFEZ는 투자유치와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IFEZ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 된 예산반영이 필요합니다. 예로 공원(녹지)관리 예산의 경우 IFEZ 본예산에 반영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원관련 예산이 IFEZ 주민참여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0 15억 4200만원 중 공원관련 예산 15억)
-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관련 된 예산 편성되어야 합니다.
청라국제도시 토지이용 계획 중 근린생활 토지를 보면 0.01km², 0.06%로 송도, 영종에 비해 면적도 구성비도 적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주택가 인접한 생활편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계획인구도 초과한 상태에서 근린생활 토지도 부족하다는 것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건설토지의 경우 청라국제도시가 가장 높은 비율_13.08%)

- 원도심과의 문화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인천의 큰 갈등(문제) 중 하나는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격차발생으로 인한 갈등 일 것입니다. IFEZ 중심으로 주요 문화복합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원도심과의 문화적 격차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트라이보울, 아트센터인천 등을 활용해서 사회공헌사업(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문화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규모 군중행사(축제)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FEZ의 경우에도 4월 기준 한 건의 예산도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2021년도는 현재의 상황이 종식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축제의 경우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방문하는 효과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소외 된다는 평가도 같이 있었습니다.
삶의 질과 문화는 떨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일이 반복 될 것을 대비, 축제예산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등에 예산을 배정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동단위에 음악회 등 소수를 위한 공연예산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첨 부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 명단

연번	분과	이름	성별	지역	비고
1	기획재정	강석균	남성	중구	
2	기획재정	김상홍	남성	연수구	
3	기획재정	김영철	남성	연수구	
4	기획재정	김용배	남성	남동구	
5	기획재정	김주억	남성	부평구	
6	기획재정	김흥섭	남성	남동구	
7	기획재정	박원일	남성	미추홀구	
8	기획재정	엄양순	여성	미추홀구	
9	기획재정	윤혜원	여성	서구	
10	기획재정	이상빈	남성	미추홀구	
11	기획재정	이성재	남성	계양구	
12	기획재정	이승배	남성	남동구	
13	기획재정	임종숙	여성	연수구	
14	기획재정	전수철	남성	중구	
15	기획재정	조현근	남성	연수구	
16	기획재정	최계철	남성	서구	
17	기획재정	최성란	여성	남동구	
18	소통행정	강정웅	남성	부평구	
19	소통행정	고수연	남성	중구	
20	소통행정	권용진	남성	미추홀구	
21	소통행정	김광자	여성	부평구	
22	소통행정	김보민	여성	계양구	
23	소통행정	김상기	남성	중구	
24	소통행정	김일례	여성	남동구	
25	소통행정	김종순	여성	남동구	
26	소통행정	모연숙	여성	서구	

연번	분과	이름	성별	지역	비고
27	소통행정	민혁기	남성	미추홀구	
28	소통행정	원영희	여성	남동구	
29	소통행정	이승원	남성	연수구	
30	소통행정	이현주	여성	서구	
31	소통행정	장수희	여성	부평구	
32	소통행정	차지영	여성	부평구	
33	소통행정	홍수미	여성	연수구	
34	재난안전	강성호	남성	계양구	
35	재난안전	구대건	남성	부평구	
36	재난안전	권명숙	여성	남동구	
37	재난안전	김은숙	여성	부평구	
38	재난안전	김재철	남성	연수구	
39	재난안전	변영현	남성	남동구	
40	재난안전	송현영	여성	동구	
41	재난안전	윤희복	남성	계양구	
42	재난안전	이상돈	남성	부평구	
43	재난안전	이상복	남성	계양구	
44	재난안전	이수현	남성	미추홀구	
45	재난안전	이영재	남성	중구	
46	재난안전	이현숙	여성	중구	
47	재난안전	인수범	남성	부평구	
48	재난안전	최민지	여성	연수구	
49	재난안전	최수광	남성	남동구	
50	재난안전	허명	남성	서구	
51	경제산업	강천석	남성	부평구	
52	경제산업	김나경	여성	연수구	
53	경제산업	김명환	남성	동구	
54	경제산업	김진선	남성	미추홀구	
55	경제산업	박동주	여성	서구	

연번	분과	이름	성별	지역	비고
56	경제산업	박미순	여성	서구	
57	경제산업	박주경	여성	연수구	
58	경제산업	변홍수	남성	부평구	
59	경제산업	송준호	남성	남동구	
60	경제산업	신규철	남성	미추홀구	
61	경제산업	심옥빈	여성	서구	
62	경제산업	양해준	남성	남동구	
63	경제산업	윤옥선	여성	계양구	
64	경제산업	이인선	여성	남동구	
65	경제산업	조민수	남성	미추홀구	
66	경제산업	차성희	여성	부평구	
67	해양항공	김미영	여성	서구	
68	해양항공	김정렬	남성	옹진군	
69	해양항공	류재영	남성	부평구	
70	해양항공	박옥희	여성	미추홀구	
71	해양항공	박헌자	여성	연수구	
72	해양항공	신영희	여성	옹진군	
73	해양항공	오폭원	남성	동구	
74	해양항공	이경철	남성	연수구	
75	해양항공	이명아	여성	서구	
76	해양항공	이상엽	남성	계양구	
77	해양항공	이홍필	남성	계양구	
78	해양항공	임종엽	남성	부평구	
79	해양항공	전선경	여성	계양구	
80	해양항공	조부현	여성	부평구	
81	해양항공	차광윤	남성	옹진군	
82	해양항공	허선규	남성	옹진군	
83	복지보건	강명순	여성	남동구	
84	복지보건	김상구	남성	남동구	

연번	분과	이름	성별	지역	비고
85	복지보건	김소향	여성	미추홀구	
86	복지보건	김은주	여성	남동구	
87	복지보건	김정현	여성	서구	
88	복지보건	방은미	여성	부평구	
89	복지보건	백세경	여성	남동구	
90	복지보건	신선영	여성	서구	
91	복지보건	신정혜	여성	서구	
92	복지보건	이순애	여성	부평구	
93	복지보건	이원숙	여성	남동구	
94	복지보건	임수철	남성	남동구	
95	복지보건	정태희	남성	연수구	
96	복지보건	조의현	남성	부평구	
97	복지보건	조정일	남성	부평구	
98	복지보건	한승지	남성	부평구	
99	복지보건	황미나	여성	부평구	
100	여성가족	강성수	남성	계양구	
101	여성가족	구본삼	여성	계양구	
102	여성가족	남성훈	남성	서구	
103	여성가족	문지현	여성	서구	
104	여성가족	박만옥	여성	계양구	
105	여성가족	변인화	여성	부평구	
106	여성가족	손순영	여성	남동구	
107	여성가족	안경선	여성	서구	
108	여성가족	양태인	남성	남동구	
109	여성가족	유미영	여성	부평구	
110	여성가족	이상화	남성	미추홀구	
111	여성가족	이현옥	여성	남동구	
112	여성가족	이희옥	남성	남동구	
113	여성가족	이희정	여성	연수구	

연번	분과	이름	성별	지역	비고
114	여성가족	장순옥	여성	부평구	
115	여성가족	최지원	여성	연수구	
116	여성가족	홍선미	여성	동구	
117	문화관광	강경애	여성	부평구	
118	문화관광	강영택	남성	연수구	
119	문화관광	권현우	남성	미추홀구	
120	문화관광	김숙경	여성	계양구	
121	문화관광	박창규	남성	남동구	
122	문화관광	박현주	여성	미추홀구	
123	문화관광	배문종	여성	남동구	
124	문화관광	변영주	남성	서구	
125	문화관광	서덕현	남성	서구	
126	문화관광	유명복	남성	중구	
127	문화관광	이다연	여성	미추홀구	
128	문화관광	이상명	남성	미추홀구	
129	문화관광	이성만	남성	강화군	
130	문화관광	이용애	여성	미추홀구	
131	문화관광	정은주	여성	미추홀구	
132	문화관광	조용희	여성	미추홀구	
133	문화관광	최창영	남성	계양구	
134	환경녹지	고광현	남성	연수구	
135	환경녹지	김원일	남성	동구	
136	환경녹지	김인철	남성	동구	
137	환경녹지	김재용	남성	미추홀구	
138	환경녹지	김정민	여성	남동구	
139	환경녹지	김찬식	남성	연수구	
140	환경녹지	김태영	남성	남동구	
141	환경녹지	박소연	여성	동구	
142	환경녹지	엄정대	남성	연수구	

연번	분과	이름	성별	지역	비고
143	환경녹지	오세의	여성	부평구	
144	환경녹지	임정수	남성	계양구	
145	환경녹지	임희숙	여성	남동구	
146	환경녹지	장필순	남성	동구	
147	환경녹지	정락재	남성	미추홀구	
148	환경녹지	조기숙	여성	연수구	
149	환경녹지	최정화	여성	서구	
150	교통	김영남	여성	계양구	
151	교통	김은미	여성	부평구	
152	교통	노정희	여성	남동구	
153	교통	문종권	남성	남동구	
154	교통	박선미	여성	부평구	
155	교통	송용섭	남성	부평구	
156	교통	송임택	남성	부평구	
157	교통	안요한	남성	서구	
158	교통	오부열	여성	미추홀구	
159	교통	이남희	여성	서구	
160	교통	이정균	남성	연수구	
161	교통	이희천	남성	부평구	
162	교통	정남자	여성	미추홀구	
163	교통	정인숙	여성	동구	
164	교통	조은영	여성	계양구	
165	교통	최광호	남성	미추홀구	
166	도시건설	김기숙	여성	남동구	
167	도시건설	김보규	여성	남동구	
168	도시건설	김정희	남성	연수구	
169	도시건설	김희숙	여성	연수구	
170	도시건설	민양기	여성	부평구	
171	도시건설	민영희	여성	남동구	

연번	분과	이름	성별	지역	비고
172	도시건설	박금옥	여성	부평구	
173	도시건설	손진하	남성	서구	
174	도시건설	유현주	여성	미추홀구	
175	도시건설	이동철	남성	부평구	
176	도시건설	이진경	여성	부평구	
177	도시건설	임봉희	여성	연수구	
178	도시건설	장회숙	여성	동구	
179	도시건설	전수경	여성	남동구	
180	도시건설	최선미	여성	미추홀구	
181	도시건설	최정애	여성	계양구	
182	도시건설	홍정규	남성	서구	
183	IFEZ	강성대	남성	부평구	
184	IFEZ	구본용	남성	서구	
185	IFEZ	구인숙	여성	서구	
186	IFEZ	김경숙	여성	남동구	
187	IFEZ	김기성	남성	미추홀구	
188	IFEZ	노현진	남성	부평구	
189	IFEZ	오병욱	남성	중구	
190	IFEZ	이광만	남성	중구	
191	IFEZ	이연정	여성	남동구	
192	IFEZ	이현주1	여성	중구	
193	IFEZ	임미영	여성	미추홀구	
194	IFEZ	장재만	남성	미추홀구	
195	IFEZ	장현희	여성	연수구	
196	IFEZ	정창교	남성	중구	
197	IFEZ	하태구	남성	중구	
198	IFEZ	황호만	남성	계양구	